	보도자료 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		보도 시점 '06. 4. 18(화)조간부터
			자료배포일 '06. 4. 17
과학기술부	담당 과학기술혁신본부 연구개발산담당관실	과 장 한명진	02) 2110-3740
정책홍보 담당관실		주무관 김영수	02) 2110-3741

2007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국과위 기획예산조정전문위원회 개최

- 과학기술혁신본부(본부장 임상규)는 4월 17일(월) 오후 3시 과기부 회의실에서 정 윤 연구개발조정관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획예산조정전문위원회(이하 전문위)를 개최하여 「2007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」을 검토한다.
- 전문위에서는 국가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위해 과학기술기본계획, 국가기술혁신체계(NIS) 구축전략 등에서 제시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「2007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」을 검토한다.
 - 주요내용으로는 다수 부처가 분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부처간 역할분담 방안에 따라 연계·조정하는 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,
 - 대형연구시설·장비·인프라 등 과다·중복투자 R&D사업은 조정하며,
 - 고용창출, 양극화 해소,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중소기업·지방·인력양성·보건의료 R&D부문은 투자를 확대하고,

- 민간의 R&D역량이 강화된 부문은 민간주도로 전환하는 등 정부·민간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는 방향이 제시된다.
- 특히, 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의 생활화·대중화, 효율화·특성화, 그리고 세계화가 추진된다.
- 이번 전문위를 거쳐 「2007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」이 확정되면, 각 부처는 이를 반영하여 5월말까지 2007년도 R&D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(안)을 제출하고,
- 6월부터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심의·검토하고, 그 결과를 반영하여 '07년 R&D예산 조정·배분(안)을 확정할 예정이다.

참고 : 2007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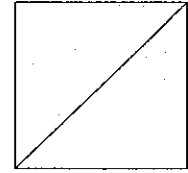
보 도 자 료

참 고 자 료



과학기술혁신본부
연구개발예산담당관실

제7회 기획·예산조정전문위원회



2007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(안)

2006. 4. 17

국가과학기술위원회
과학기술혁신본부

목 차

I. 국가연구개발투자의 성과와 과제	1
II. '07년 국가연구개발 중점투자방향	3
1. 기본원칙	3
2. 전략적 투자 확충분야	4
3. 선별적 투자 조정분야	7

1. 국가연구개발투자의 성과와 과제

- 지식기반경제의 급속한 진전 속에 선진국을 비롯한 주요 경쟁국들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

〈 최근 주요 국가의 R&D투자동향 〉

- 미국 :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R&D투자 확대 발표('06.1.31 대통령 연두교서)
 - 향후 10년간 나노·초전도·에너지 기술분야 등 핵심 기초연구 프로그램을 위한 연방정부예산을 2배로 증액
- 일본 :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('06~'10년) 기간중 총 25조원을 R&D분야에 투자
 - 신산업창조전략2005 : 7대 전략산업군별 중점추진분야 설정, 지역활성화·부품소재산업 강화, 인력양성·기술축적·지적재산관리 정책 추진
- 중국 : 경제성장에 대한 과학기술 기여도를 60%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국무원에서 국가중장기과학기술발전계획('06~'20년) 발표('06.1.26)
 - 주요 국민경제사회 발전 11개 영역, 68개 단기간 해결기술 선정
 - 도약발전과 기술공백 해결을 위해 16개 전문프로젝트 선정
 - 미래첨단기술 개발과 혁신능력 제고를 위해 8개 영역, 27개 첨단기술과 18개 기초과학 과제 선정

- 우리나라 GDP 대비 총 R&D투자비중(민간 포함)은 선진국 수준이나 절대규모는 선진국과 큰 격차

- 지난 30여년간('71~'03) 총 R&D투자(145조원) 중에서 3/4 이상이 최근 10여년('91~'03)간에 집중

- 전체 R&D투자의 절대규모는 미국의 1/15, 일본의 1/7

- 정부R&D투자('05년 7.8조원)는 최근 6년간('00~'05) 연평균 14.0% 증가하였으나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

- 정부R&D비중 : 한 23%('04), 미 31%('04), 영 27%('03), 독 30%('04)

□ 정부의 지속적인 R&D투자 확대정책에 힘입어 R&D역량이 크게 강화되고, 최근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

○ '05년 IMD 과학경쟁력 15위('04년 19위), 기술경쟁력 2위('04년 8위)

○ 논문, 특허 등의 성과지표도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추세

* SCI발표논문 : ('01) 14,889건 (16위) → ('04) 19,279건 (14위)

* 미국특허등록 : ('01) 3,538건 (7위) → ('04) 4,428건 (4위)

□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동안 투자확대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

○ 선진국에 비해 R&D투자의 효율성이 낮고 R&D결과의 경제적 성과로의 연계 부족

* 기술혁신성과('03년 OECD) : 29개국 중 18위 (신지식창출분야 18위, 산학연계·기술확산분야 22위, 산업혁신분야 15위)

* 기초연구의 장기적 경제발전 기여도 : 60개국 중 31위('05년 IMD 평가결과)

○ 민간 R&D투자가 활발한 분야에 정부투자가 중복되는 등 정부와 민간간의 역할분담이 불명확

* 산업R&D투자 중 전자·기계산업비중('04) : 민간 75.8%, 정부 55.3%

○ 기초연구 투자가 미흡하여 주요 핵심기술을 선진국에 의존

* 기초연구투자비중(%) : 한국 15('04), 미국 19('03), 프랑스 23('02), 독일 21('93)

* 기술무역수지 : ('01) △20억불 → ('04) △27억불

○ R&D자원이 수도권·대전 및 대기업에 집중되어 지방혁신 역량 및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이 취약

* 총R&D중 수도권·대전 R&D집중도('04) : 연구개발비 76.8%, 연구인력 71.4%

* 민간R&D중 대기업 R&D집중도('04) : 연구개발비 79.1%, 연구인력 59.5%

II. '07년 국가연구개발 중점투자방향

1. 기본원칙

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전

- ◇ 과학문화 확산,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 강화, 창조적 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활용을 통한 과학기술의 생활화·대중화
- ◇ 미래유망기술의 확보, R&D재원의 전략적 배분·활용 등 과학기술의 효율화·특성화
 - * 각 부처 R&D사업계획과 연계한 국가중장기 중점투자분야 우선순위 도출을 통해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Total Road Map을 금년 중에 마련
- ◇ 과학기술의 글로벌 네트워킹 구축 등을 통한 과학기술의 세계화



- ◇ 국가발전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위해 「과학기술기본계획」, 국가기술혁신체계(NIS) 구축전략 등에서 제시한 방향을 반영
 - 참여정부가 확정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을 우선적으로 뒷받침
 - R&D사업·정책·제도와 관련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심의·조정한 결과를 반영
 - 투자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
 - 중복·과잉투자 해소를 위해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조정에 긴밀히 연계
 - 국회·언론·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, 민간전문가의 평가 및 예산검토의견 등을 적극 반영

2. 전략적 투자 확충분야

□ 기초연구·원천기술 투자를 확충하고 창조적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지원

○ 기초연구예산비중을 '07년 25% 수준으로 확대

- 개인단위 창의적 기초연구 지원을 확충하고, 신진연구자를 위한 R&D투자를 확대
- 기업의 중장기적 기술역량 축적과 기술과급효과 제고를 위한 기초·원천·기반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산·학·연 협력을 강화

○ 미래 기술혁신을 선도할 첨단핵심기술인력 양성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창조적 인재강국 구현을 뒷받침

- 「이공계인력 육성·지원 기본계획」, 「여성과학기술인 육성·지원 기본계획」을 토대로 인력양성 지원

□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신성장동력분야 투자를 확충하고, 특성화를 추진

○ 차세대성장동력사업, 21세기 프론티어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관련 사업간 연계를 강화

- 미래성장동력 원천기술, BT·NT의 선도기반기술을 확보

○ 고부가가치·원천기술형 핵심부품·소재개발사업 지원을 확대

- 부품·소재개발과 함께 국산화율이 낮은 제조장비 개발을 병행 지원

□ 지방 및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균형 발전과 동반성장을 뒷받침

○ 지방R&D예산비중을 '07년 40%수준으로 확대

- 혁신주도형 지역전략산업과 지역혁신거점사업 지원을 확대하되, 지방R&D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추진체계를 점검·보완
- 지방R&D실태조사(국과위·균형위 공동)를 통해 합리적 지원·조정체계 등 개선방안을 마련

○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상용화 기술개발을 지원하며,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강화

- 졸업과 동시 산업현장에 활용되도록 대학내 「산학협력실」 및 「기업부설연구소」를 설치하여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
-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수요대기업·출연(연)·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산·학·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지원

□ 공공·복지기술, 문화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

○ 우주·해양·국방·보건의료·에너지·건설·방재분야 R&D투자를 강화

○ 과학기술의 대중화·생활화를 위한 과학기술 문화활동을 지원

- 독창적 전통과학기술 발굴을 지원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방과학문화 확산사업을 추진

□ 과학기술 정보화, 지적재산 보호, 해외협력 강화 등을 통해 국가기술경쟁력을 제고

○ 해외우수인력·시설·정보 등 과학기술자원을 적극 활용

- 지구적 문제해결을 위한 해외협력 강화를 통해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 전략기술을 획득

○ 해외과학기술정보 네트워크 구축, 기술정보·인력 DB 구축 등 과학기술정보의 체계적 수집·유통·활용을 강화

-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(NTIS)의 차질 없는 구축을 지원

□ 출연(연)의 안정적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고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

○ 출연(연) 고유기능에 부합되는 부처의 R&D사업을 출연(연)의 기본사업에 단계적으로 이관

- 출연(연)에서 수행중인 각 부처의 시설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

○ 출연(연)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연구사업을 본격화하고, 출연(연) 및 연구회의 특성화를 추진

- 출연(연) 중장기 발전전략에 따른 『Top Brand Project』를 지원

3. 선별적 투자 조정분야

□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구조조정을 추진

- 다수부처가 분산·중복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중복성 검토 결과, 부처간 역할분담 등을 고려하여 조정
- 유망기술 및 현안과제 해결기술을 선별하여 집중투자
- 대형연구시설·장비의 과다·중복 투자를 조정

□ 성과평가결과를 예산조정에 연계하여 중복·과잉투자를 해소

- 국과위 R&D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성과우수 사업은 증액하고, 성과미흡 사업은 대폭 축소조정
- 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연계사업은 성과 극대화를 위해 사업간 협력체제를 강화

□ 민간R&D역량이 강화된 분야는 민간주도로 전환하여 재원 배분구조를 선진화

- 민간의 R&D투자가 활발한 분야는 지원을 축소
- 연구개발이 완료되거나 실용화 단계의 사업은 민간투자를 유도하도록 조정

참 고

'06년 R&D재정투자 규모

(억원)

	'05년(A)	'06년(B)	증감(B-A)	%
R&D재정 투자	77,996	89,096	11,100	14.2
<회계별>				
예 산	67,368	72,283	4,915	7.3
기 금	10,628	16,813	6,185	58.2
<부처별>				
교 육 부	8,778	9,672	894	10.2
과 기 부	19,609	21,691	2,082	10.6
국 방 부	9,293	226 ¹⁾	△9,067	△97.6
방 위 청	-	10,618	10,618	순증
문 광 부	104	139	35	33.7
농 립 부	694	837	143	20.6
산 자 부	17,673	19,956	2,283	12.9
정 통 부	6,972	8,028	1,056	15.1
복 지 부	1,657	1,969	312	18.8
환 경 부	1,340	1,459	119	8.9
건 교 부	1,519	2,620	1,101	72.5
해 수 부	1,406	1,719	313	22.3
기 상 청	209	304	95	45.5
소 방 청	43	103	60	139.5
문화재청	140	152	12	8.6
농 진 청	3,044	3,361	317	10.4
산 립 청	416	477	61	14.7
중 기 청	2,317	2,679	362	15.6
식 약 청	445	549	104	23.4
기 타 ²⁾	2,337	2,537	200	8.6

1) 방위사업청 신설에 따른 예산 이관
 2) 재경부, 통일부, 외교통상부, 법무부, 노동부 등